광역경제권 네트워크형 추진체계 구축 시급

김 선 배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부각되는 있는 지식기반경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요체로 하는 新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지역발전 정책으로써 광역경제권 구축은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지만 정책의 체계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의 개념이 단순히 지역경제의 공간적 범위확대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에 잡히는 가시적 정책목표나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수단의 발굴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광역경제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발굴이나 사업 추진체계의 확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본다면 광역경제권은 단일 행정조직이 관리할 수 없는 공간적 범위를 갖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역경제권은 산업의 전후방연관 구조와 가치사슬 구조에 기초한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연계체제 형성을 통해 집적경제 효과를 배가시키기는 데 유리하다. 또한 R&D, 인력, 사회적 자본 등 혁신자원의 공동 활용과 임계규모 확보가 용이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각개 약진식 정책집행과 지자체내 소관 부서 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클러스터

연계체제 구축과 혁신자원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을 위해 '경쟁과 협력'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개별사업'의 구조로 이루어진 계층형 추진체계를 갖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 유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업간 연계 및 정보교류가 미흡한 상황이다. 네트워크형 추진체계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과 사업실행 기능을 분리하고 광역경제권 내의 시·도 간, 지자체내 각종 혁신지원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총괄하는 소위 '광역경제권 추진단'과 같은 새로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추진단은 지역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는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연계·협력 사업 등 지역사업의 기획·조정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추진단은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총괄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과 같은 시·도 간 연계·협력 시범사업의 관리·감독 기능도 추진단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과 사업 실행 기능의 유기적인 접합과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의 활성화 기능을 전담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지원 플랫폼은 '만남의 장', '기업지원 단일 창구', '중개협력 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클러스터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클러스터의 효율적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장단계로 들어서려면 개인 및 특정 기관에 의한 리더십 보다 기업지원 플랫폼과 같은 혁신주체 및 클러스터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된 조직적인 클러스터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만남의 장' 프로그램은 기업, 대학, 지원 기관 등 혁신주체들 간의 신뢰와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사업으로 클러스터의 발전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과 의견 수렴 등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지원 단일 창구' 기능은 코디네이터와 같은 지역산업 전문가에 의해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지

원기관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클러스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과 지원기관 모두가 부담해야 할 협력 및 지원 파트너 탐색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클러스터 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중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애로기술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기술지주회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플랫폼이 운영될 경우 기존의 지원기관(특화센터)은 전문화된 기업지원 기능으로 특성화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들 지원기관(특화센터)은 연구기관, 대학 등과 같은 기존 전문기관들과 느슨한 결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여 광역경제권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